

2001

地域振興施策의

推進方向

방기성 /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장

I. 序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노력을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두면 지역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적극적으로 개발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지방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공적 개입, 다시 말해서 지역간의 격차와 이에 따른 문제 지역의 대두에서 비롯된 지역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정책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 정책은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지역개발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주민이 어느 곳에 살거나 동일한 가치의 생활수준을 가질 수 있게 국토공간의 균형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볼 때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Ⅱ. 地域開發事業의 推進方向

지역개발의 주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개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상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개발수요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지역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의 지역개발사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奥地·島嶼地域綜合開發事業

가. 現況 및 實態

국토면적의 80%가 농어촌지역임에도 그동안 정부의 개발정책 방향은 주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오지·도서지역은 개발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낙후지역으로 지역 불균형 및 소득격차의 심화 등 상대적 소외감을 초래하여 왔다.

따라서 산간·오지, 도서·낙도 등 낙후지역에 대한 주민생활복지증진 및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6년도 『도서개발촉진법』과 '88년도 『오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는 개발수요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이 낙후된 오지·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좀더 획기적인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그간의 投資實績 및 評價

제1차 오지개발 10개년계획기간('90~'99)동안 403개면에 9,375억원을 투자하여 9,542건의 생활, 생산, 문화복지시설 등을 정비하였다.(〈표 1〉 참조)

분야별로는 생활기반시설 73%, 산업기반시설 14%, 주거환경개선 5% 등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오지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로확·포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집중투자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에 많은 투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 문화복지시설 등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하였다.

세부 추진성과로는 도로개설·확포장 등 2,468건, 총연장 3,837km에 3,942억원을 투자, 소규모 교량 489건에 27km가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오지지역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6,658개 마을 291,583세대 943,712명의 오지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농경지 진입로 확·포장 등 산업기반시설에 총 1,676건 1,620억원을 투자, 1,948개 마을(73,770세대 234,872명)에 수해를 줄임으로써 기계화 영농, 취수원확보 등 소득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고,

또한 하수구 정비 222건 113,409m, 마을안길 정비 549건 233,077m, 마을진입로 확·포장 31,857m 등에 555억원을 투자, 746개마을 33,131세대 107,220명

에게 수해를 줄임으로써 오지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서개발사업의 경우 제1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기간('88~'97) 동안 10인이상이 거주하는 449개 도서에 9,076억원을 투자하여 급수, 전기, 도로, 어항시설 등 3,10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분야별 추진은 생산기반시설 48.7%, 생활기반시설 40.8%, 환경개선시설 3.3%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서여건상 가장 필요한 선박접안시설과 주민의 육상교통로인 도로시설 등 주민의 소득 및 교통소통과 관련되는 사업에 집중투자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환경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의 투자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추진 성과로는 급수, 전기, 도로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1,046건 4,659억원, 어항시설, 방조제 등 생산기반시설에 1,636건 4,727억원 등을 투자하여 지리적으로 열악한 도서주민 288천세대 869

<표 1> 오지·도서 개발사업 추진실적

구 분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기 간	· '90~'00(11년간)	· '88~'00(13년간)
대 상	· 403개 오지면	· 410개 도서(10인이상 상주도서 등)
사 업 량	· 8,464건	· 4,563건
투자실적	· 1조 9,097억원	· 1조 5,467억원

천명에게 수혜를 주게 되었다.

다. 向後 投資方向 및 發展戰略

첫째, 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주민숙원 사업 위주의 소규모 분산투자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자효과가 미흡하고 생활기반시설 및 소득증대를 위주로 한 제한적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별·도서별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추진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오지면 소재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면소재지 중심으로 개발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비하여 오지면 소재지의 낙후성이 심화되고 있어 면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오지개발 촉진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오지의 범위에 면소재지를 포함하여 면지역의 중심지로서 필요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현행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별 개발 정도는 개발수요 및 낙후 정도에 따라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원은 일률적 배정으로 지역간 격차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불합리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낙후정도에 따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 등 배분방식의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넷째, 도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수요에 비하여 정부의 지원 규모가 열악하여 제2차 도서개발 10개년계획('98~2007)을 기간내 마무리하기 위하여는 연평균 960억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지원규모는 연평균 540억원 정도로서 계획의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계획기간내 개발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획기적인 재정 투자의 확대와 민·융자 분야의 투자방안 강구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라. 2001 事業計劃

오지개발사업은 생산·소득기반시설 등 주민의 기초적 생활수요를 우선 해결하고 문화복지·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사업의 내실화 및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일선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사 지도·

<표 2> 2001 오지·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행정자치부 소관)

구 분	오지종합개발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대 상	· 224개 오지면	· 186개 도서
사업추진	· 1,351건	· 392건
투자계획	· 1,875억원	· 834억원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완공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며, 도서종합개발사업도 급수·전기·도로시설 확충 등에 주력하여 도서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에 나갓다.

금년도 오지·도서개발사업에 투자될 행정자치부소관 예산은 2,709억원으로 2000년대비 19.9% 증액되었으며 도서당 오지면당 837백만원, 448백만원씩 투자할 계획이다.(<표 2> 참조)

3. 地方道路의 整備事業

가. 現況 및 實態

우리나라의 도로는 19C 이전에는 보행이나 우마차 통행을 위하여 오솔길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근대에 들어와서 자동차의 출현과 함께 도로개발이 시작되었고 이 당시의 도로개발정책은 대체로 일제침략으로 인한 물자수송에 주력해 왔다. 광복직후에는 오늘날의 도로

구조시설 기준과는 다르지만 지방도로 총 연장 19,220km중 324km가 포장됨으로써 포장률은 1.7%에 불과하였으나 국가기간 도로망인 국도는 총 연장 5,213km중 737km가 포장됨으로써 포장률은 14%이며 도로망은 일체의 대륙침략과 우리나라로부터 착취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대부분 남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광복이 되면서 3년간의 지방도로 개발은 일제가 착공한 잔여공사 마무리와 도로개수사업을 실시하는 데 그쳤으며 그 당시의 도로는 대부분 노폭이 좁아 확·포장을 요하는 사리도였으나 1950년 6.25사변으로 구체적인 도로건설정책을 수립할 수 없었던 반면에 군사목적용 도로를 많이 개설 사용하였고 특히 1950~1953년도 사이에 지방도로의 일부가 국도로 편입되는 등 도로등급 조정이 있었다.

휴전후에도 국가의 예산집행은 전쟁복구 및 난민구호에 급급하여 본격적인 도로건설분야의 투자는 어려웠고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교량복구와 교통로

연결 등의 원상회복이 고작이었으나 긴급한 전쟁복구가 끝난 1957년에는 경제복구 도로사업 5개년(1957~1962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로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재원확충이 어려워 실시되지 못한 채 1960년 정권교체로 폐기되었다.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기초로 한 국토개발계획에 근간을 두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1962~1966)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성장과 개발지역 확장에 따른 교통체계망 신장에 주력하였고 특히, 전국 도로체계망의 계획수립은 도로개발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철도에만 의존해 오던 수송 구조 체계의 개혁이 선결문제로 대두되어 수송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한 철도중심의 교통수단을 공로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수송구조의 일대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여 본격적인 고속국도 건설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69년 7월 21일 개통된 인천항구~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국도(29.4km)와 1970년 7월 7일 개통된 서울~부산간(4차로 428km) 고속국도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새로운 도로건설기술을 개발시키

고 철도위주의 수송형태를 자동차 교통으로 분담시키는 전환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이전에는 국가기간 도로망에 중점을 두고 도로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과 연결되는 지방도로의 개발은 크게 뒤져 1979년말 포장률이 일반국도 60.7%에 비해 지방도로는 불과 6.4%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1980년대에 도시와 농어촌과의 불균형 성장 해소차원에서 상위도로와 농어촌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개발에 역점을 두어 기채 및 IBRD 차관사업과 국비지원으로 지방도로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이 결과 1989년말 지방도로 총 연장 30,354km 중 15,523km가 포장됨으로써 도·농간 접근도 향상과 지역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19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양여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도로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1994년까지는 상위도로와 지역간 연결위주로 사리도 확·포장사업에만 집중투자해 왔으나 자동차가 예상을 크

게 뛰어넘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이어져 지방도로개발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1995년부터 교통소통대책사업에도 양여금을 할애하여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물류비용절감과 국가 간선도로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5.12.6 도로법을 개정 지방도중 간선기능을 가진 주요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 공사비를 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96년부터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도로사업에 많은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수질개선사업의 투자재원 보전을 위해 양여금 재원중 지방도로정비사업비인 “양여금특정사업재원”의 1,000분의 70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0분의 630으로 감소 조정함으로써 도로개발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도로의 개발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리도 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그간의 投資實績 및 評價

그간 지방도로개발사업 추진은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연계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비포장도로의 2차선 확·포장사업에 주력하여 왔으나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정체 심화로 4차선 확·포장사업, 읍·면우회도로 등 교통소통대책사업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지방도로상 교량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위험교량의 재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 마련을 위하여 '94년 12월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하여 '95년부터 비포장도로의 2차선 확·포장사업 위주 투자에서 교통정체구간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2000. 12월 말까지 총 대상 137,442km 중 62,764km 확·포장하여 포장률을 46%까지 향상시켰다.(〈표 3〉 참조)

또한 '95년부터 시행한 지방도·군도의 4차선확장, 읍·면우회도로, 장대교, 터널사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위험교량 등 교통소통대책사업 규모는 〈표 4〉와 표와 같다.

<표 3> 지방도로별 개발실적 (2000.12월말 현재)

(단위 : km)

도 로 별	대상연장	2000까지 포장실적	포장률(%)	장래계획
합 계	137,442	62,764	46	74,678
광역시도	12,365	7,807	63	4,558
지방도	17,153	13,705	80	3,448
시 도	29,553	17,995	61	11,558
군 도	15,896	7,234	46	8,662
농어촌도로	62,475	16,023	26	46,452

다. 向後 投資方向 및 發展戰略

앞으로는 기존의 투자 방법에서 탈피, 국가기간 도로망과 연계한 지방도로망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용 최소화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자동차의 증가가 한

설확충이 최우선 정책과제일 수밖에 없고(※ 4차선 건설시 2차선도로에 비해 교통량 처리능력은 약 400% 이상증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애로구간의 해소와 함께 도로망의 효율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로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로, 현재의 많은 도로가 자연발생

<표 4> 지방도·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현황

(단위 : km, 억원)

구 분	'98년						'99년						2000년					
	지 방 도			군 도			지 방 도			군 도			지 방 도			군 도		
	개소	사업량	사업비 (양여금)	개소	사업량	사업비 (양여금)	개소	사업량	사업비 (양여금)	개소	사업량	사업비 (양여금)	개소	사업량	사업비 (양여금)	개소	사업량	사업비 (양여금)
계	128	58	2,114 (1,057)	307	72.5	2,114 (1,480)	137	56.3	2,633 (1,316)	276	95.5	2,632 (1,844)	163	52.4	2,785 (1,671)	276	126.1	2,924 (2,339)
4차선 확 장	36	36	1,139 (570)	14	7.6	206 (144)	35	37.4	1,180 (590)	13	10.5	394 (276)	45	30.9	1,290 (774)	13	10.7	355 (284)
위험교량 재 가 설	42	2	367 (184)	206	7.3	1,149 (804)	58	6.2	558 (279)	104	4.5	756 (530)	60	2.3	472 (283)	78	3.4	698 (558)
읍·면 우회도로	28	15	298 (149)	19	13.5	154 (108)	25	9.9	284 (142)	19	12.1	174 (122)	26	11.9	300 (180)	15	13.2	163 (130)
장대교 터 널	20	1	291 (145)	22	1.4	310 (217)	19	2.8	611 (305)	83	3.6	818 (572)	31	7.0	719 (432)	83	5.5	1,017 (814)
재포장	2	4	19 (9)	46	42.7	295 (207)	-	-	-	57	64.8	490 (344)	1	0.3	4 (2)	87	93.3	691 (553)

※ 군도는 시의 읍면지역시도 포함

계점에 도달한 선진외국의 경우는 시설의 효율성 증대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경우는 앞으로 차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교통애로 해소 효과가 가장 큰 시

적으로 형성된 도로이므로 도로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면 시설기능이 약 20~30%증가가 가능하므로 기존 시설의 운용효율 증대는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므로 기존도로

<표 5> 2001 지방도로별 추진계획

(단위 : km, 억원)

도 로 별	사업량	사 업 비			포장률 (‘99→2000) (%)
		계	양여금	지방비	
계	1,778	34,473	22,927	11,546	46→47
광역시도	39	7,592	3,796	3,796	63→64
지 방 도	242	7,030	4,218	2,812	80→81
시 도	291	9,313	6,115	3,918	61→62
군 도	354	4,745	3,796	949	46→47
농어촌도로	852	5,793	5,002	791	26→27

의 운용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는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의 계획, 건설, 유지관리 단계마다 안전 개념을 도입하고 선진국 수준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는 도로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수요관리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높이는 반면에 자동차의 대당 운행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와 주행세 도입 등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도로시설이 확충되도록 함으로서 조세 형평성과 자동차 운행 억제효과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

다섯째, 21세기에는 통일된 국가로서 동북아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한지역에 기수립된 도로망계획이 북한지역과 연결되는 남북한의 종합도로망 계획을 완성하고 남한은 국토간선골격망(7

×9), 국도망조정, 지방도로망조정계획이 완성단계인 반면, 북측은 일제시대에 구축된 철도중심의 교통망으로 도로망은 절대 취약하므로 서해안축, 동해안축 등 남북연결 골격망을 중국대륙, 러시아 대륙과의 연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라. 2001 事業計劃

금년도 지방도로사업은 그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비포장도로의 2차선 확·포장사업과 병행하면서 교통정체 해소 및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에 중점 투자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으로 총 3조 4,473억원을 투자 1,778km를 정비하여 포장률을 47%까지 높일 계획이며, 특히 광역시와 일반시 등의 극심한 도심지 교

통난 완화를 위해 총 1조 4,269억원을 투자, 141km의 도로를 개설하고, 지방도·군도상의 4차선 확·포장, 읍·면우회도로, 장대교가설 등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총 5,483억원을 투자, 265km를 정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소통원활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도로별 사업내역은 <표 5> 및 <표 6>과 같다.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93년부터 행정자치부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95.1.5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자전거 도로·주차장 등 관련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자전거 통행방법, 안전문제 등 자전거이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전거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보관대 등 이용시설의 체계적 정

<표 6> 2001지방도·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계획

(단위 : km, 억원)

구 분	지 방 도			군 도		
	개 소	사업량	사업비 (양여금)	개 소	사업량	사업비 (양여금)
계	153	73.9	4,218 (2,531)	309	190.2	3,690 (2,952)
4차선확장	45	46.2	2,219	17	13.3	453
위험교량재가설	60	3.6	584	143	6.3	1,212
읍·면우회도로	23	14.9	390	16	12.7	261
장대교·터널가설	23	5.8	997	29	2.3	677
재 포 장	2	3.4	28	104	155.6	1,087

4. 자전거利用 活性化事業

가. 현황 및 실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심각한 도시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등 근검절약

비 및 자전거 타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존 횡단보도턱 정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9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나. 그간의 投資實績 및 評價

그동안 2000년까지 총 5,132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4,908km와 281천 대분의 자전거 보관대, 68천개소의 횡단 보도턱 등 자전거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 시설을 정비하였다.(<표 7> 참조)

또한 잠재되어 있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유발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의 날”, “자전거의 날” 등 기념일에 시민·단체·동호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행사와 토론회, 홍보사진전 등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지금은 각급 자치단체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99년도와 2000년도에 전국 12,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85%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91%가 자전거 이용시설이 완비되면 자전거를 타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으로서 앞으로 국민의 자전거 이용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전환 등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가 있다.

첫째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절대부족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하여는 자전거 도로·보관대, 고가·지하차도의 연속 경사시설, 정보제공시설 등 관련시설이 완비되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신속성·편리성·경제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자전거 이용시설이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외국에 비하여 크게 미흡한 실정에 있어 자전거 타기 생활화가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고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만 하겠다.

또한 앞으로의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에 있어서 1단계인 '98~2002년까지는

<표 7>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 추진현황(2000까지)

(금액:백만원)

구 분	계	지방도로	보 관 대	횡단보도턱 정 비
사 업 량		4,908.5km	281,487대분	68,419개소
사 업 비	513,176	441,618	30,570	40,988

국가지원아래 자전거이용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신개발도시, 관광·사적지, 교육·공업도시와 같은 중소시범도시를 중심으로 통근·통학로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결노선, 시장·백화점 등 생활권 중심의 다중이용시설과 연계되는 자전거 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2단계인 2003~2010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경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이용 여건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 주·정차나 노상적치물 등 각종 장애물이 상존해 있고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 있어서도 보도에서의 자전거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전거 이용자가 일방적인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차도가 없는 좁은 이면도로에서의 자동차 속도제한 미흡, 자동차 주행시 보행자에 대한 보호조항은 있으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크게 미흡하여 자전거 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 강화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이다.

'93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요시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그동안 지자체와 국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나 우리의 교통정책이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이고 자전거는 교통수단이기 보다는 레저·스포츠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건설 초기단계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업추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부처의 인식부족, 협조체계 미흡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교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조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관심유발,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向後 投資方向 및 發展戰略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단기적 대책 외에

도,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투자 외에도 각종 도시계획이나 택지·공업·관광단지조성, 공공도로의 개설시에는 계획단계부터 자전거도로·보관대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도 자전거이용시설 저변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각급 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 대표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공직자·근로자·학생들이 적극 동참해 오도록 솔선수범해 나가야 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근거한 자전거 등록제 실시는 자전거도난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전거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자전거 이용 호응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자전거 관련업무 전담공무원 확보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쾌적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자전거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2010년까지 자전거교통수송 분담율을 '99년말 현재 2.4%에서 10%까지 제고시키기 위하여 2002년까지 1단계 기간동안에만 7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이의 30%인 2천억원(매년 400억원)정도를 중앙에서 지원하여야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나 '98년에 194억원, '99년에 350억원, 2000년 250억원, 2001년 270억원으로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국가지원이 미흡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국비나 특별교부세 등 범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으며, 아울러 지방비 투자 확대 방안도 강구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다.

라. 2001 事業計劃

총 834억여원(국비 120, 교부세 150, 지방비 564)을 전국적 파급효과가 큰 48개 시범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748km, 자전거보관대 22천대분, 횡단보도턱 5,306여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아울러 정부기관, 지자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타기 시범기관 지정·운영 자전거타기 대행진, 국민토론회 등 각종 이벤트 추진, 각 언론기관을 통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표 8> 200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규모

(단위 : 억원)

단위사업명	합 계		국비보조사업		교부세 시책사업		자 체 사 업	
	사업량	사업비 (지원)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교부세)	사업량	사업비
총 계		834 (270)		240 (120)		300 (150)		294
자전거 도로	748km	774 (251)	227	221 (110)	281	281 (141)	240	272
자전거 보관대	22천대	22 (9)	8	6 (4)	10	10 (5)	4	6
횡단 보도턱	5천개소	34 (10)	2	13 (6)	2	9 (4)	1	12
실적평가용역	26개도시	4	-	-	-	-	26개도시	4

홍보방영 등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표 8> 참조)

하천 등 수변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나. 그간의 投資實績 및 評價

5. 國土公園化事業 推進

가. 現況 및 實態

국토공원화 사업은 2002년 월드컵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깨끗한 환경과 정감이 가는 한국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많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하여 전국의 도로변 공한지를 활용, 소공원을 조성하거나 도심지역 생활주변의 자투리땅 등의 공간 녹화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8년말 전국도를 대상으로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99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연간 연차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00년까지 국비·교부세·지방비 총 2,924억원을 투자하여 8,821개소 41,726천㎡에 달하는 면적에 도로변 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도심지 자투리 땅을 이용한 생활주변 공간녹화, 하천 수변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여 540만여명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지역주민

과 관광객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 93개 사업장을 시범지구로 선정,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한 모델로 제시함은 물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조정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국토공원화 사업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9. 2월 조정학회에 용역을 주어 국토공원화사업 기술교범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매년초 전국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우수 사업장 견학을 실시하여 국토공원화사업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및 사업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단기적이고 소모성이 많은 꽃길조성 등 단순사업에만 치중하는 사례가 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 직무교육과 우수 사업장 견학 등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도출된 문제

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 2001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전국에 전파하여 국토공원화 사업이 더욱 내실있고 생산성이 높은 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실업대책 예산의 우선 배정 등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向後 投資方向 및 發展戰略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및 새로운 기법을 발굴하여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조정 전문분야인 국토공원화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인력 및 전문기술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지자체별로 산림·도로·도시·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와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또한 자체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추진 전담팀을 구성토록 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비 범위내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는 조정기사 등 특수인부를 별도 고용하고, 사업규모가 큰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조정학회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라. 2001 事業計劃

금년에는 총 833억원(국비 300, 교부세 30, 지방비 503)을 투자하여 1,712개소에 9,560천㎡의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중 국비 300억원과 지방비 490억원 등 총 79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국토공원화사업과 특별교부세 시책사업비 30억원과 지방비 13억원을 투자하는 소규모 공원화사업으로 구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많은 실직자들의 고용창출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직영사업이 불가 할 경우에는 전문시공업체와 공사계약하여 추진하되 공공근로사업자를 병행 투입토록하여 약 1,250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19개 사업장을 소규모 공원화 사업지구로 선정, 주요 가로변의 유희부지, 폐도부지 등 공한지와 도시내 자투리땅 등에 소공원을 조성하되 주차시설 및 파고라·벤치 등 휴식시설이나 소규모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족단

위의 인근주민이나 이동중인 관광객, 운전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관광·레저·스포츠 등 다목적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 全國土 無窮花 심기事業

가. 現況 및 實態

무궁화는 우리민족의 찬란한 오천년 역사속에서 은근과 끈기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겨레의 열이 담겨있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이다. 그동안 산림청 주관으로 나라꽃인 무궁화 심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나 무궁화에 대한 일부 잘못된 인식과 관리소홀 등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잘 가꾸어진 무궁화를 쉽게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나라꽃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감이 가는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나라꽃 심기 및 가꾸기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시책사

<표 9> 무궁화심기 사업계획(2000~2002)

구 분		전체계획	2000 추진	2001 계획	2002 계획
사업량	개소	1,705	712	573	420
	천본	2,724	1,373	781	570
사업비(백만원)		55,052	20,341	19,989	14,722

업 대상으로 선정, 연차별 계획을 수립,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그간의 投資實績 및 評價

사업추진 원년인 2000년도에는 교부세 시책사업비 184억원과 지방비 19억원 등 총 203억원을 투자하여 712개소에 약 137만본의 무궁화를 식재하는 한편, 각급 학교에도 무궁화묘목을 나누어 주어 자라나는 학생들이 무궁화 심기 및 가꾸기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무궁화 홍보책자 15,000부를 발간 유관기관·단체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하여 나라꽃 무궁화의 유래와 심고 가꾸기 요령 등을 홍보하였으며,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중앙과 각급 자치단체별로 나라꽃 전시회 및 글짓기·사생대회 등 나라꽃 선양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0년도 추진평가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사업의 대부분이 이월되고 무궁화 개화가 안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2001년도 8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다. 向後 投資方向 및 發展戰略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시책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무궁화연구회 등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월드컵 행사가 개최되는 2002년까지 3개년간 총 494억원을 투입하여 월드컵 경기장 및 사적·관광지, 도심지 생활 주변 및 주요도로변 등에 지역특성에 맞는 무궁화공원이나 화단·꽃길을 조성하는 등 약 272만본의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식재할 계획이다.<표 9> 참조)

나라꽃 무궁화는 겨레의 애환과 일이 서려있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로써 전국 어디서나 우리의 생활주변 가까

이에서 잘 가꾸어져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무궁화에 대한 일부 그릇된 인식과 홍보부족, 심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이 일과성·전시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범정부 차원의 예산지원과 선양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국민들이 나라꽃을 심고 가꾸기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번 추진하는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나라꽃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무궁화를 화분에 식재하여 온실에서 개화시켜 월드컵 기간동안 월드컵경기장 및 선수촌 등에 전시하기 위한 무궁화 개화시기 조절사업을 금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무궁화연구회·산림청·시도 산림환경연구소 등 관련단

체·기관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라. 2001 사업계획

금년에는 특별교부세 180억원과 지방비 2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무궁화 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특별교부세 156억원을 지원하여 도로변과 기존의 공원·생활주변 등 559개소에 69만본의 무궁화를 식재하고, 특별교부세 48억원과 지방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사적·관광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무궁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그동안 정부에서 무궁화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다는 분석하에 특별교부세와 지방비를 합쳐 총 16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에 식재한 무궁화에 대한 시비, 전정,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월드컵 행사가 개최되는 전국 10개도시에 지원하여 화분에 식재한 무궁화를 온실에서 개

화시켜 월드컵경기장과 선수촌 및 식당 등에 배치하여 행사기간 동안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나라꽃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무궁화 개화시기 조절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住居環境改善事業

가. 農漁村 住居環境改善事業

1) 現況 및 實態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을 생활에 편리한 현대식주택으로 개량하고 농어촌의 생활기반시설 및 마을안길과 상·하수시설 등을 확충해 주는 등 농

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0년대 후반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붕개량에서 출발하여 '76년부터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전면개량으로 확대 발전하여 '95년부터 쾌적한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생산적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발전되었다.(〈표 10〉 참조)

2) 그간의 投資實績 및 評價

그동안 2000년까지 총 3조 5,936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불량주택개량 344천동 부엌 및 화장실 개량 894천동, 마을정비 5,175마을, 빈집 26천동을 정비하여 주거환경과 소득원 연계개발로 2000년대의 생동하는 농어촌마을 조성으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자연마을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오·폐수를 초기단계에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표 10〉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76~2000)

(단위:억원)

구 분	주 택 개 량		마 을 정 비		빈 집 정 비	
	동수(천동)	사업비	마을수	사업비	동수(천동)	사업비
전체계획	505	63,997	8,083	15,768	78	240
추진실적 ('76 ~ '00)	344	31,806	5,175	4,045	26	85
향후계획 (2001 ~ 2008)	161	32,191	2,908	11,723	52	155
※ 2001추진	8,500	1,700	270	858	83	25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95. 12. 29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과 '96. 7. 1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99. 1. 18 불합리한 제반규정을 정비하여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농어민의 불만 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3) 向後 投資方向 및 發展戰略

그동안의 사업추진으로 농어촌의 주거환경이 상당수준 개선되었고 도시형 주거문화를 희망하는 농어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다수지역에 소규모 분산지원함에 따른 투자효과의 저하, 지역별·마을별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의 추진 등 다소 개선·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 동안 나타났던 미흡한 부문을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단위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주택개량 등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농어촌도로, 경지정리, 생활용수 개발 등 정부의 각종시책사업을 연계추진하여 사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통성, 상징성 등 잠재된 특성을 적극 발굴, 관광

상품 등으로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주거환경의 개선만이 아닌 잠재소득원 발굴과 연계한 실질적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이 유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idea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우대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4) 2001 事業計劃

2001년도에는 총 2,58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500동의 불량주택 개량과 270지구의 하수도시설 및 마을의 기반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관련부처의 시책사업을 연계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나. 都市低所得住民 住居環境 改善事業

1) 現況 및 實態

현재 전국의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 개선(대상)지구는 613개이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총면적은 33km²로 도시면적의 0.03%에 해당되며, 인구는 도시인구

<표 12>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자현황('89~'99)

(단위:억원, %)

사 업 명	단위	사 업 량	사 업 비	투 자 비 율
합 계	건	6,632	14,238	100.0
생활기반시설	건	3,431	12,572	88.30
환경위생시설	건	1,687	897	6.30
생활안전시설	건	1,136	240	1.68
후생복지시설	건	378	529	3.72

의 2.26%인 929천명, 세대수는 289천세대, 평균 가족 원수는 3.22명으로 도시 평균 가구원수 3.11명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평균인구는 1,516명, 평균면적은 0.054km²이고 인구밀도는 28,158인/km²로 도시인구밀도의 약 32배 수준으로 정주환경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표 11> 참조)

1989년 4월 제정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추진하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소외감 불식 및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도시기능을 제고하기 위

한 사업으로 '99까지의 임시조치법의 한 시기한을 2004년까지 연장개정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조 6천억을 투자하여 도시달동네지역을 완전히 정비할 계획이다.

2) 그간의 投資實績 및 評價

그동안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연 1,980개 지구에 총 1조 4,238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주변환경을 말끔히 단장하는 등 과거의 달동네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표 12> 참조)

3) 向後 投資方向 및 發展戰略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

<표 11>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

지 역	면적(km ²)	인구수(천명)	가구수(천세대)	인구밀도(명)
도 시 지 역	50,135	43,676	13,979	871
주거환경개선지역	33(0.06%)	929(2.13%)	288(2.06%)	28,158(3,232%)

<표 13> 소도읍 현황

구 분	면적(km ²)	세대수(천세대)	인구수(천명)	인구밀도(km ² /명)
전 국	99,800	15,443	47,335	474
읍	13,689(14%)	1,239(8%)	3,823(8%)	279

한임시조치법」상 2004년까지인 사업기간을 2003년까지 앞당겨 마무리하기 위하여 3개년간 총 1조 6천억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뒷골목 정비 등 부실한 가로망 체계를 완전히 정비하고 작업장·탁아소 설치 등 잠재된 주부 노동력 향상을 측면지원하여 소득원을 창출하고 복지회관, 소공원 등 확충으로 「삶의 질」을 중산층 수준으로 향상코자 한다.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재정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치단체는 기간내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목표년도내 도시달동네가 완전해소 되도록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4) 2001 事業計劃

금년도에도 총 4,0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188개 달동네 지역에 상·하수도설치 및 소방도로 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소외 받고 있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 小都邑 開發事業

1) 現況 및 實態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에는 196개의 읍과 1,229개의 면 및 2,086개의 동이 있으며(2000.2.1현재) 그 중 읍에는 다음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개읍의 총면적은 국토면적의 14%인 13,689km², 인구수는 총인구의 8%인 3,823천명, 세대수는 1,239천세대이다.

소도읍의 평균인구는 19,505명, 평균면적은 69.9km²이며, 인구밀도는 279명/km²로 전국인구밀도의 약 3/5수준이다.(<표 13> 참조)

소도읍개발사업은 1972년부터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읍가꾸기사업’이 시작되었고 1977년부터는 침체된 소도읍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준도시기능을 담당케 함으로써 도·농간의 지역생

활수준을 평준화시켜 나가기 위한 ‘소도읍가꾸기’란 시책사업으로 추진 하다가 1990년부터 현재의 ‘소도읍개발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며, 읍 소재지를 배후 농어촌지역의 경제·문화·행정 등의 종합중심지로 개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주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도·농간의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그간 投資實績 및 評價

그간 '72~2000까지 총 8,870억원을 투자하여 연 1,774개 읍·면 소재지의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소도읍지역주민의 기초적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도읍이 배후 농어촌지역의 중심지 기능역할 수행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정주기반조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2001.1.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읍지역을 배후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소도읍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표 14> 참조)

3) 向後 投資方向 및 發展戰略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소도읍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주변 농어촌생활권역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 소도읍은 배후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를 정착케 하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소도읍의 입지별·규모별·기능별 특성에 따른 개발·육성을 통하여 잠재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첫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토대로 금년도 상반기중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전국의 지방소

<표 14> 소도읍개발사업 투자현황('72~2000)>

(단위:억원)

사 업 명	단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교부세	지방비
합 계	건	91,806	8,870	1,570	7,300
가 로 정비	건	13,986	7,963	1,414	6,549
주거환경개선	건	69,894	655	120	535
시 장 정 비	건	6,546	174	26	148
기 타	건	1,380	78	10	68

도움에 대한 인구, 산업, 정주여건 등 기본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육성사업을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안정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겠다.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지원이 미흡하여 만족할 만한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을 위해 향후 매년 2천억원 정도 규모가

개발이나 소외된 계층의 생활편익을 다소 향상시켰다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지만 사업비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제때에 집중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해당 지역주민이 바라는 지역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확충방안 마련 등

지 상 중 계

2000 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 안내

□ 연구보고서명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
-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 지역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방안
- 지방자치단체 변화관리를 위한 전략기획의 활용방안
-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 지방예산제도의 개선방안(성과측정을 위한 투입비용산정을 중심으로)
- 재산세 과표산정체계의 개선방안
- 지방세 부과·징수체계의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 지방문화산업 육성방안(문화산업지구 조성을 중심으로)
- 도시재정지출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 자료검색 : www.krila.re.kr (전화 02-3488-7361 ~ 2)

- 편집실 -

지역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어느 곳에 살더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기준이상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스스로의 개발동기 형성과 합리적인 개발방법의 모색 등으로 지역개발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는 데 힘써 나가겠다. ☺